농번기 일손 빼앗는 '희망근로'

전남 1만4,168명 신청, 농민들 "하필 영농철에…"

농산물 값 폭락·자재 값 폭등·일손 부족 '삼중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은 전남 농촌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자재 가격 폭등, 일손 부족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 고용지원 사업으로 지난 1일 전국적으로 시작된 '희망근로 프로젝트' 때문에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 일손이 더욱 모자랄 것으로 우려돼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일 전남도 내 농가들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올 비료 값은 2배 이상으로, 농약값도 10~30% 이상 폭등했다.

모내기 전에 뿌려야 하는 복합비료의 경우 지난해 포대(20㎏)당 9천800원이던 것이 지금은 무려 2만3천원까지 올랐다.

특히 비료와 달리 농약값은 정부 지원이 거의 없어 농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농기계 부품값 등 농자재 가격도 예년에 비해 20~40%까지 큰 폭으로 올라 올해 농민들의 농사 비용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일손 부족이다. 매년 농번기 철이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올해는 정부가 차상위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시행시기가 영농철과 겹치면서 일손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대부분의 농촌 인력이었던 고령 인구마저 희망근로 프로젝트로 몰리면서 영농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희망근로 참가신청 마감 결과 전남도 내 22개 시·군에서 총 1만4천168명이 신청해 모집 인원 1만188명의 139%에 달했다. 또 확정된 희망근로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전체의 67%를 차지했다.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일하고 간식비까지 포함해 일당 3만6천원을 받는데다 휴가와 4대 보험까지 보장하고 있어 희망근로가 큰 인기를 끈 것이다.

하지만, 희망근로자 대부분이 고령 인구여서 애초 제도 도입의 취지인 실업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고 농번기 일손만 빼앗아 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이 일자 전남도는 희망근로자들로 구성된 '농번기 일손 돕기 기동단'을 구성해 시·군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해남군 해남읍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서모(40)씨는 "어렵게 구한 인력들이 희망근로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두는 등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설상가상 농촌 인력난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최근 인건비를 5만2천원~5만7천원까지 인상해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음주운전 의심 경찰관 동부署 5시간 뒤 측정

경찰, 감찰조사 방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찰관을 조사하던 일선 지구대 직원들이 해당 경찰관을 임의 동행한 뒤 5시간 만에 음주측정을 해 의혹이 일고 있다.

2일 광주동부경찰과 남부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50분께 광주시 동구 모 3차선 도로에서 승용차가 1·2차선 중간에 정차돼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B지구대 직원들은 신고현장으로 출동, 승용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A씨를 깨워 임의동행 형식으로 지구대로 데려왔다.

경찰은 지구대 동행 5시간 뒤 A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했고 훈방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038%(위드마크 미적용)가 나왔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A씨가 광주 모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사(경찰관)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지구대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요금문제로 싸운 뒤 1·2차선 중간에 승용차를 세우고 가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사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B지구대에서 음주측정이 5시간 동안 지연된 이유 등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중상해 교통사고 첫 기소

광주지검, 어린이 친 60대 형사처벌 '주목'

운전 중 유치원생을 치어 사지마비에 빠뜨린 화물차 운전자가 중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가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결정한 이후 광주·전남지역 첫 사례여서 실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검은 2일 어린이에게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김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2시께 영광군 군남면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고가다 도로를 횡단하던 A(6)군을 치어 대뇌출혈에 의한 사지마비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영광경찰은 김씨에게 중과실은 없었지만, 운전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검찰의 지휘를 받아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었다.

이는 지난 2월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운전 중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7급공무원 수뢰혐의 체포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2일 시청 홈페이지 관리, 시 발주 공사 등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시 7급 공무원 A(39)씨를 체포했다. A씨는 또 업체와 홈페이지 관리계약을 하고도 자신의 아내에게 관리업무를 맡도록 하고 매월 인건비로 100만원씩을 챙겼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

'비리 구속' 군수 형님 등친 사기범

쌍나팔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된 현직 군수의 친형을 등친 '간 큰' 사기범이 검찰에 적발.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길수)는 2일 화순군수 친형인 전모(65)씨를 대신해 화순군의 한 골프장 주변 토지를 사준 뒤 땅값 일부를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42)씨를 구속.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7월께 전씨에게 "골프장 인근 땅을 사놓으면 골프장 측에 큰 차익을 남기고 되팔 수 있다"고 접근, 땅 10여 필지를 2억7천만원에 사주고 추가로 3천만원을 요구해 가로챈 혐의.

○…한편 전씨는 지난 3월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자금의 출처를 집중 추궁받는 등 땅 때문에 이래저래 속앓이.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전남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광주시 동구 광주 YMCA에서 '공안탄압 분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광주·전남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이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 등에 항의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공안탄압 분쇄·민주주의 수호"

광주·전남 시민단체 '대책위' 구성 … 1인시위 등 펼쳐

진보성향의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현 정부가 공안탄압을 일삼고 있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 1인 시위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과 전농 광주·전남연맹, 민예총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2일 광주시 동구 광주YMCA에서 '공안탄압 분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광주·전남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 결성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연일 벌어지는 반(反)민주, 반 민생, 반 인권, 반통일, 전쟁 대결국면 조성 등은 국민을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권과 인권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국민을 위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권의 위기를 공안탄압으로 돌파하려는 이명박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더 이상 정부의 탄압을 두고 볼 수가 없어 시민사회진영이 모여 이를 막기 위해 대책위를 결성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삼복서점 앞 등 주요지점 1인 시위 ▲인터넷 홍보를 통한 여론형성 ▲6·15 공동선언 9주년 기념행사 참여 ▲민주인권문화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책위에 가입한 주요 단체들은 광주·전남 실천연대, 민주노총 광주·전남 본부, 민주노동당 시·도당, 농민회 광주·전남연맹 등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韓·中 송금 450억 환치기 2명 검거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거래 대금을 송금하거나 수령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450억원 상당의 불법외환거래를 주도한 환치기 조직이 붙잡혔다.

2일 여수세관에 따르면 중국 길림성에 거주하면서 한국과 중국 간의 수산물 무역업을 하던 조선족 A(여·46)씨와 A씨와 같은 고향출신으로 한국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B(51)씨 등 2명을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2006년 6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중국과 한국 간의 무역대금을 불법으로 송금 또는 수령하고자 하는 업체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중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불법체류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